

주제회의  
사회적경제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사례로 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최재영  
[광주광역시자활센터 사무국장]

○ 고령화, 경제위기, 소득의 불평등,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함께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위기)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 수해, 한파 등 각종 자연재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주거환경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천방안을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 모두가 알다시피 사회적경제의 기계적 범주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일컫는다. 그 중 자활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영역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며, 전국에 약 165곳의 주거복지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5대 표준화사업으로 시작된 집수리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집수리사업이라 함은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공사, 도배공사, 난방공사, 지붕누수공사 등 기본적인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활기업의 주거복지사업은 이미 사회적 문제해결과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권에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추진해 온 자활사업의 한 줄기이며, 사회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집수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주거복지 자활기업의 태생 자체가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된 시장과 안정된 예산지원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집수리사업은 점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앞다퉈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원정책 목적이 단순 시혜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할 주체(업체)가 마땅치 않다는 점. 셋째, 수혜대상 가구의 선정부터 사후지원까지 행정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에 민감한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정책 목적의 합이 일치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인 주거복지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가칭)에너지복지센터 설립을 제안해본다. 가칭)에너지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은 지방정부의 몫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본 센터의 주된 역할은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가구특성, 형태, 욕구순위, 중복지원, 지원제도 정보제공 등 각종 주거취약계층D/B 구축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판단과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별 태양광설치, 친환경보일러 시공과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효율화 및 친환경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